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산업자원부 왜 이러나!

산업자원부의 업무처리 행태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모양새를 나타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중앙부서가 기업들의 로비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관경유착이 없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정경유착과 관경유착이 계속되고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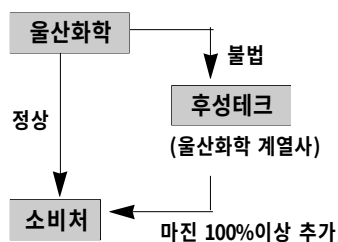
대표적인 관경유착이 CFC 문제이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FC를 비롯한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 및 사용을 감축기로 결정한 이후 비롯된 CFC 문제는 생산 및 수입, 가격, 그리고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을 둘러싸고 매년 여러가지 잡다한 말썽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오용 및 유용문제로 그동안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전혀 없다면 당연한 일이겠으나, 3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산자부와 정밀화학진흥회가 명분에 맞지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화학산업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산자부만이 모르는 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방안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가져봄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이를 기피하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아니 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CFC를 비롯한 오존층 파괴물질과 대체재 생산 및 수입수량 배정도 그동안 말썽이 일어왔다. 요즘 들어서는 가격을 둘러싸고 산자부와 울산화학, 수입기업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1999년 5월10일에는 특정물질 수입기업 8사가 공동으로 청와대, 산자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개선요구가 가열화되고 있다.

CFC-11 및 CFC-12의 불법거래형태



수입기업들이 진정한 내용은 간단하다. 산자부가 1992년부터 오존층 보호법률에 의거해 CFC-11 및 CFC-12 수입을 완전배제하고 울산화학에 생산 및 판매를 독점시킨 결과, 울산화학의 독과점 횡포가 너무 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CFC 대체제품인 HCFC 및 HFC 가격을 덤핑판매함으로써 관련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울산화학은 산자부의 판매승인도 없는 계열사 후성테크를 통해 CFC를 판매함으로써 100% 이상의 중간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CFC-11은 산자부 승인가격 kg당 1300원에 기금 390원을 더해 1690원에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성테크에서는 2700원에, CFC-12도 승인가격 2900원에 기금 390원을 더해 3290원에 판매해야 하나 48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수요처 입장에서는 CFC-11은 CIF 기준 톤당 1230달러(kg당 1700원), CFC-12는 톤당 1700달러(kg당 2400원)에 수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제가격의 2배에 가까운 후성테크 공급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직전연도인 1992년 4월말을 기준으로 생산 및 수입실적 대비 Q+를 재배정해 불법적인 고마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5월1일 기금 kg당 195원 및 마진 15원 등 CFC 가격을 210원 인하하는데 그칠 뿐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성테크의 불법적인 고마진 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공적기금을 대폭 인하하는 반국가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산자부는 1998년12월 울산화학의 적정원가를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산정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1999년4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성테크의 불법 판매단가를 울산화학의 출고가격으로 발표함으로써 불법판매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울산화학에게 독점권을 넘겨주고, 불법판매까지 비호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